

"KTX승무원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하라!"

✎ 변백선 기자 | Ⓞ 승인 2015.07.22 15:53



▲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이 오는 24일 예정된 KTX 승무원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부의 양심적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대법원이 지난 2월 26일 KTX 승무원 불법파견을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판결했고, 오는 7월 24일부터 KTX 승무원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시작된다. 동일한 열차에 탑승하는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하청 자회사 소속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무관하고, 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이며, KTX 여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는 것이 이유였다.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시민사회가 7월 22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위협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24일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부의 양심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직접고용을 외치며 싸워온 KTX 승무원 동지들의 눈물이 생각난다"고 말하고 "철도차량을 운전하는데 있어서 안전과 수송은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이고, 하루 15만 이상의 국민을 수송하는 KTX 안전이 요구되는데 열차 팀장과 승무원 업무가 안전업무와 무관하다는 반사회적 안전불감증, 반노동적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 사회가 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오는 24일 대법원에서 직접적인 KTX 당사자들의 직접고용은 말할 것도 없고 파기환송심에서 안전을 우선하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KTX승무지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승하 지부장. © 변백선 기자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 KTX 승무원 직접고용과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 중단, 코레일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장그래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항소심까지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법리판단을 하게 돼 있으나 대법원은 사실상 열차 팀장과 승무원이 관계가 없다는 등 이유로 1,2심 사실관계를 뒤집어 버렸다"면서 "스스로가 법률심을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사건이고 승무원들이 열차 팀장과 소통하며 일할 수밖에 없고 철도의 직접 노동자임을 부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지적했다.

KTX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2월 26일 대법원에서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도 없는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철도공사는 자회사에 있는 코레일 관광레저 승무원에게 안전업무를 대놓고 맡기기 시작했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이고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마치 업무는 하지만 너희의 업무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부정하고 "우리의 외침을 멈출 수 없으며,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철도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철도 안전 업무 외주화와 기능조정이란 미명 하에 진행 중인 철도 민영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외주화를 확대하면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양심적인 파기환송심 판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KTX 승무원들의 직접고용과 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